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중국정부, 식품가격 상한제 도입 예정

- 중국정부는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식품가격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향후 몇 주간 식품가격 상한제를 포함한 통제 및 투기단속 조치들을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.
 -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대비 4.4%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던 지난 2008년 9월 4.6%를 기록한 이후 2년 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함.
 - 이 중 식품 외의 물가상승률은 1.6%에 불과한 반면, 식품은 이상기후 여파로 무려 10.1% 급등해 식품가격 급등이 최근 물가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(NDRC)와 지방정부는 채소가격 급등과 농산물 사재기를 막기 위해 식품가격 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.
 -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옥수수, 면화 등 농산물 사재기로 가격을 급등시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침도 세웠으며, 주요 식품가격을 묶어 제한선을 정해 이를 상회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이른바 ‘조합권 가격통제’ 방안 도입도 검토하고 있음.
-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책 시행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연내 중국정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.
 - 최근 물가상승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부양책으로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린데다가, 미국 등 선진국들의 양적완화정책으로 해외 단기자금(핫머니)들이 중국으로 흘러들어오면서 통화량이 급증한 데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.
 - 이에 따라 중국정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이어 연내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.

(로이터, 11/16)